



국회직 8급 행정학

1. 출제영역분석

총론	7	재무행정론	4
정책론	3	정보화사회와 행정	-
조직론	4	행정환류	-
인사행정론	5	지방자치론	2

2.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24	기출변형 문제	1	신유형 문제	-
-------	----	---------	---	--------	---

3.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짜짓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1	1	3	8		8	4

01 국세 중 간접세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개별소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주세
- ② 증권거래세, 증여세, 상속세, 관세
- ③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 ④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 ⑤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해설] ① [O] 국세 중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해당한다.

summary | 국세의 간접세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857



02 다음 중 <보기>의 가상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보 기>

요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사이에는 민원 관련 허가를 미루려는 A국장의 기이한 행동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A국장은 자기 손으로 승인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업무보고도 과장을 시켜서 하는 등 단체장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해외일정을 핑계로 아예 장기간 자리를 뜨기도 했다. A국장이 승인여부에 대한 실무진의 의견을 제대로 올리지 않자 안달이 난 쪽은 다름 아닌 바로 단체장이다. 단체장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국장과 단체장이 책임을 떠넘기려는 옷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입기 말에 논란이 될 사안을 결정할 공무원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중앙부처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자치단체의 일선행정 현장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그 사이에 정부 정책의 신뢰는 저하되고, 신뢰를 잃은 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 ① 업무수행지침을 규정한 공식적인 법규정만을 너무 고집하고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하지 않는 행태를 말한다.
- ②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인 권위의 계층적 구조에서 상사의 명령까지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행태를 말한다.
- ③ 관료들이 위험 회피적이고 변화 저항적이며 책임 회피적인 보신주의로 빠지는 행태를 말한다.
- ④ 관료제에서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여 조직과 대상 국민에게 순응의 불편이나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⑤ 기관에 대한 정서적 집착과 같은 귀속주의나 기관과 자신을 하나로 보는 심리적 동일시 현상을 말한다.

[해설] 해당 보기에서 A국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공무원의 무사 안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① [X] 법규만능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 ② [X] 과잉동조에 대한 설명이다.

- ③ [O] 무사 안일주의 하에서 관료들은 위험회피적이고 변화저항적이며, 책임회피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사회에서는 보신주의가 더욱 팽배하게 된다.
- ④ [X] 형식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 ⑤ [X] 할거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45, 346, 427



| 개념 문제 |

03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관료행태,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이익집단 등의 비시장적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탐색한다.

- ① 과학적 관리론
- ② 공공선택론
- ③ 행태주의
- ④ 발전행정론
- ⑤ 현상학

【해설】 ② [O]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비시장적 의사결정부분(정책결정구조, 투표 규칙, 투표자행태, 정당정치, 관료행태, 이익집단)의 연구에 활용하는 특성을 가진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35



| 법령 문제 |

04 다음 중 「국가재정법」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건전성의 확보
- ② 국민부담의 최소화
- ③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
- ④ 예산과정의 국민참여 제고를 위한 노력
- 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해설】 ⑤ [X] 「국가재정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원칙은 재정건전성 확보의 원칙, 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 재정성과의 원칙, 투명성과 참여성의 원칙, 성인지적 효과평가의 원칙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599



05 다음 <보기> 중 정책집행의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을 반영한다.
- ㄴ.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 ㄷ.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 ㄹ.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에서 주도한다.
- ㅁ. 공식적인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므로 집행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용이하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해설】 ㄴ, ㄷ, ㄹ [O]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은 일선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이 성공적 집행의 핵심조건이다. 또한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의 존재가 가능성을 부인하고, 정책목표 대신 집행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ㄱ, ㅁ [X]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은 기본적으로 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목표를 중시하므로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하다.

▶ 올바른 지문

- ㄱ.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은 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을 반영한다.
- ㅁ.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은 공식적인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므로 집행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용이하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273~277



06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는 달리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②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보수와 복무규율을 적용받는다.
- ③ 교육·소방·경찰 공무원 및 법관, 검사, 군인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④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⑤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해설】 ③ [X] 특정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올바른 지문

③ 교육·소방·경찰 공무원 및 법관, 검사, 군인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summary | 임용방식과 업무특성에 따른 분류

구분	특징	예시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 성	• 기술, 연구,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대다수의 공무원. 성질상 직업공무원의 주류형성 • 일반적으로 계급은 1급~9급으로 구분 •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이 없으며, 연구직이나 지도직 공무원은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의 2계급으로 구분	행정 일반, 기술, 연구·지도직 공무원, 국회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광역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특정직	• 개별법(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는 특수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우리나라 공무원 중 법관, 검사, 군인 등 특정직 비중이 가장 높음.	교육·소방·경찰·외무공무원 및 법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검사, 군인과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장·차관(법제처장, 통계청장, 기상청장 포함) 및 국가정보원의 원·차장, 국회사무총장, 감사원 사무총장 등
	별정직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국회수석전문위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472



07 다음 중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② 재의요구권
- ③ 기금의 설치·운용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⑤ 청원의 수리와 처리

【해설】 ①, ③, ④, ⑤ [O]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5. 기금의 설치·운용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② [X]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한다.

동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summary | 지방의회의 권한 VS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① 조례 제정 및 개폐	① 자치단체의 대표 및 사무총괄권
② 예산의 의결 및 결산 승인	② 사무의 관리·집행권
③ 중요정책의 심의·결정 : 사용료·수수료·분담금의 부과·징수·감면 등	③ 소속행정청·관할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
④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항의 의결	④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 및 지휘감독권
⑤ 행정감시권(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요구,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감사)	⑤ 지방의회에의 발안권
⑥ 청원수리·처리권	⑥ 규칙제정권
⑦ 기관선출 및 자율운영권	⑦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권(재의요구 및 제소)
	⑧ 선결처분
	⑨ 임시회 소집요구권(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 소집권은 지방의회 사무국에서 함.)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823, 824



08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정성
- ② 정부조직의 내부성
- ③ 파생적 외부효과
- ④ 점증적 정책결정의 불확실성
- ⑤ 비용과 편익의 괴리

[해설] ①, ②, ③, ⑤ [O], ④ [X]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는 내부성(사적목표),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괴리) 등이 있다.

summary | 정부실패 원인

내부성 (사적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료제 내에서 공익보다는 개인과 조직의 이익(사적목표)을 우선시 하는 현상 - Niskanen의 관료예산극대화모형, Parkinson의 법칙
X-비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주체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 관리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부족해 생산의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현상. 관리상의 비효율(기술적 비효율)을 의미. 정부의 독점적 지위로 발생
파생적 외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잠재적·비의도적 확산효과나 부작용 - 경기회복정책이 경기과잉을 초래, 주택안정화정책이 부동산 투기 조장 등
권력의 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의 특혜나 남용 등 정부에 의해서 오히려 분배적 불평등이 야기되는 현상 - 특혜적 기업면허, 진입장벽의 유지 등
비용과 편익의 절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재의 특성상 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분리로 인해 비용에 대해 둔감해지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상. 거시적 절연과 미시적 절연이 발생 • 미시적 절연 : 조직화된 소수의 수혜집단이 다수의 비용부담을 요구. 포획을 활용 • 거시적 절연 : 다수의 수혜집단이 소수의 비용부담을 요구. 투표나 선거를 활용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69



09 다음 중 규제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은 증가하는 상황
- ②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은 결과 피규제자의 비용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상황
- ③ 기업체에게 상품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를 강화할수록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정보량은 줄어들게 되는 상황
- ④ 과도한 규제를 무리하게 설정하다 보면 실제로는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상황
- ⑤ 소득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

[해설] ①, ③, ④, ⑤ [X] 규제의 역설에 대한 설명이다.
② [O] 규제피라미드는 규제가 규제를 낳은 결과 피규제자의 규제 부담이 점점 증가하는 현상이다.

summary | 규제의 역설

- ① 과도한 규제는 과소한 규제가 된다.
- ②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은 증가한다.
- ③ 최고의 기술을 요구하는 규제는 기술 개발을 지연시킨다.
- ④ 소득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 ⑤ 기업체에 자기 상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수록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정보량이 줄어든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4, 35



10 다음 중 행태주의와 제도주의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 ① 행태주의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과 같은 가치를 강조한다.
- ② 제도주의에서는 사회과학도 엄격한 자연과학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 ③ 행태주의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학문의 실천력을 중시한다.
- ④ 각 국에서 채택된 정책의 상이성과 효과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에서 찾으려는 것은 제도주의 접근의 한 방식이다.
- ⑤ 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행태주의와 제도주의는 같다.

[해설] ① [X] 행태주의는 검증이 불가능한 가치를 연구대상에서 배제하고(가치중립성), 사실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초점을 둔다.
 ② [X] 사회현상의 연구도 자연과학처럼 실증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행태주의이다.
 ③ [X] 행태주의는 사회문제 해결의 적실성·실천성이 결여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⑤ [X] 행태주의는 과거의 규칙성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이론의 보수성의 특성을 갖는다, 제도주의는 법이나 제도를 연구의 주된 대상으로 삼고 이를 통해 현상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입장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행태주의에서는 가치와 사실의 분리를 강조한다.
- ② 행태주의는 사회과학도 엄격한 자연과학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 ③ 행태주의는 사회문제 해결의 적실성·실천성이 결여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 ⑤ 행태주의는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지 않는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26, 127, 142, 143



11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차량 10부제 운행은 윌슨(Wilson)이 제시한 규제정치이론의 네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① 대중정치
- ② 기업가정치
- ③ 이익집단정치
- ④ 고객정치
- ⑤ 소비자정치

[해설] ① [O] 차량10부제 운행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은 체증 완화에 따른 편익과 당일 차량 제한에 따른 비용이 발생된다. 이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다수에 분산되는 상황으로 대중정치의 상황이다.

summary | 윌슨(Wilson)의 규제정치모형

구분		규제의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규제 비용	넓게 분산	• 대중정치(다수결정치) : 편익과 비용 모두 분산 • 수혜자·비용부담자 모두 집단행동딜레마 발생 ☞ 음란물규제, 낙태규제 등	• 고객정치 : 편익 집중, 비용 분산 • 수혜자 집단에 의한 포획 시도, 쉽게 추진, 주로 경제적 규제와 연관 ☞ 수입규제, 직업면허, 환경규제 완화 등
	좁게 집중	• 기업가 정치 : 편익 분산, 비용 집중 • 비용부담집단(피규제집단)에 의한 포획 시도, 느슨한 정책집행이 발생, 주로 사회적 규제와 연관 ☞ 환경오염규제, 퇴폐업소단속, 외제차에 대한 수입규제완화 등	• 이익집단정치 : 편익 집중, 비용 집중 • 서로의 이익 확보를 위한 집단 간 대립 ☞ 한약분쟁, 의약분업규제 등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2



| 짝짓기 |

12 다음 중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직위해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으므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임용행위
- ② 직권면직: 직제·정원의 변경으로 직위의 폐지나 초과정원이 발생한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면해주되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는 임용행위
- ③ 해임: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되는 임용행위
- ④ 파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는 임용행위
- ⑤ 정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며 보수를 전액 감하는 임용행위

【해설】 ① [X]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신분은 보유하나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일정기간 직무에서 격리시키는 처분이다.
 ② [X] 직권면직은 직제·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경우 등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해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다.
 ③, ④ [X] 해임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제한은 없으나 뇌물·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 근무기간 5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의 1/8, 5년 이상인 경우 1/4을 감액한다. 파면은 퇴직급여의 일부를 삭감하는데 5년 미만의 경우 1/4, 5년 이상인 경우 1/2을 감액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직위해제 :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으나 신분은 보유하는 임용행위
- ② 직권면직 : 직제·정원의 변경으로 직위의 폐지나 초과정원이 발생한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임용행위
- ③ 파면 :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퇴직급여액의 2분의 1(5년 이상 근무)이 삭감되는 임용행위
- ④ 해임 :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는 임용행위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576, 580, 581

▶ ⑤

| 개념 문제 |

13 다음 중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보수체계 설계 시 성과급 비중을 설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이론은?

- ① 애덤스(Adams)의 형평성이론
- ②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 이원론
- ③ 엘더퍼(Alderfer)의 ERG(존재, 관계, 성장)이론
- ④ 머슬로(Maslow)의 욕구 5단계론
- ⑤ 헤크만(Hackman)과 올드햄(Oldham)의 직무특성이론

【해설】 ① [O] 애덤스(Adams)의 형평성 이론은 공정한 보상의 성과급 제도를 설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형평성 이론에서 동기유발 과정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공헌도(투입)와 보상(산출)을 준거인물과 비교하고, 불형평성을 느끼는 경우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유발된다고 본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400, 532

▶ ①

14 다음 중 「지방자치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지사의 소환청구 요건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이다.
- ② 비례대표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 ③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④ 주민소환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 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해설】 ① [O]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② [O] 지방자치법 제20조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③ [O]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 3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②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X] 주민소환투표권자의 3분의 1(4분의 1 ×)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동법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소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⑤ [O]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조【주민소환투표의 효력】 ①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 올바른 지문

④ 주민소환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845, 846



| 내용 분류 |

15 다음 중 국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 명시이월
- ② 예비비 사용
- ③ 예산의 이용
- ④ 계속비
- ⑤ 예산의 이체

【해설】 ⑤ [X] 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직무와 권한의 변동 시 예산도 이에 따라 책임소관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책임소관만 변동될 뿐 사용목적과 금액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국회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659

▶ ⑤

| 제도 및 이론비교 |

16 다음 중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에서 강조하는 네 가지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무적 관점
- ② 프로그램적 관점
- ③ 고객 관점
- ④ 내부프로세스 관점
- ⑤ 학습과 성장 관점

【해설】 ② [X] 균형성과표에서는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을 강조한다.

summary | 균형성과표(균형성과관리)의 4대 관점

재무적 관점	개념 : 기업의 주인인 주주에게 보여주어야 할 성과의 관점. 기업 BSC에 있어 최종목표 공공부문 : 공공부문은 사명달성이 궁극적 목표이므로 재무적 관점은 제약조건으로 작용	성과지표 :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 전통적 후행 지표
고객 관점	개념 : 서비스의 구매자인 고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 성과의 관점. 공공부문 : 공공부문에서는 재무적 관점보다 고객의 관점이 중요. 그러나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은 한계 有	성과지표 :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등
내부 프로세스 (과정)관점	개념 :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내부의 일처리 방식의 혁신관점 공공부문 :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재화와 서비스의 전달 과정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	성과지표 : 의사결정과정의 시민참여, 적법절차 등
학습과 성장 관점	개념 : 변화와 개선의 능력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 것인가의 관점. 미래업무운영에 대한 근거를 제공. '미래의 관점'으로 대체 설명되기도 함. 공공부문 : 구성원의 지식의 창조와 관리, 지속적인 자기혁신과 성장 등이 중요한 요소	성과지표 : 학습 동아리 수, 내부 제안 건수, 직무 만족도 등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442

▶ ②

17 다음 중 직위분류제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위: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
- ② 직급: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를 수 있는 직위의 집단
- ③ 직렬: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
- ④ 직류: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
- ⑤ 직군: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상당히 유사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

【해설】 ⑤ [X] 등급(grade)에 대한 설명이다. 직군(group)은 직무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 올바른 지문

- ⑤ 등급: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상당히 유사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

summary | 직위분류제의 구조

직위(position)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 (예 OO 담당)
직 무 분 석	직류 (sub-series)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 (예 행정직렬 내 일반행정직류와 재경직류)
	직렬(series)	직무 종류가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군 (예 행정직군 내 행정직렬과 세무직렬)
	직군(group)	직무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예 행정직군, 기술직군)
직 무 평 가	직급(class)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성질·난이도·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를 수 있는 직위의 집단(예 행정 9급, 세무 9급)
	직무등급 (grade)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유사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예 9급)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477

▶ ⑤

18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인간관계론에서 조직 참여자의 생산성은 육체적 능력보다 사회적 규범에 의해 좌우된다.
- ㄴ. 과학적 관리론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업무수행에 적용할 유일 최선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 ㄷ. 체제론은 비계서적 관점을 중시한다.
- ㄹ. 발전행정론은 정치, 사회, 경제의 균형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해설】 ㄱ [O] 인간관계론은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측면을 중시하여 조직 참여자의 생산성은 사회적 규범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았다.
 ㄴ [O] 과학적 관리론은 발견 가능한 유일 최선의 방법(the best one way)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찾는 데 주력하였다.
 ㄷ [X] 체제론은 계서적 관점을 중시한다. 하위의 단순체제는 복잡한 상위의 체제에 속한다고 이해한다.
 ㄹ [X] 발전행정론은 행정권력을 비대화시켰다.

▶ 올바른 지문

- ㄷ. 체제론은 계서적 관점을 중시한다.
- ㄹ. 발전행정론은 정치, 사회, 경제의 역할과 발전을 저해시켰다(행정의 비대화).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23~125, 132, 320



19 다음 중 베버(Weber)가 제시한 이념형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의 충원 및 승진은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② 조직 내의 모든 결정행위나 작동은 공식적으로 확립된 법규체제에 따른다.
- ③ 하급자는 상급자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하는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조직이 운영된다.
- ④ 민원인의 만족 극대화를 위해 업무처리 시 관료와 민원인과의 긴밀한 감정교류가 중시된다.
- ⑤ 조직 내의 모든 업무는 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④ [X] 관료제는 임무수행의 비개인화(impersonality)의 특징을 갖는다. 임무수행 시 개인적 이익이나 특별한 사정, 상대방의 지위 등에 구애되는 일 없이 공평무사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 올바른 지문

- ④ 민원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는 공평무사함을 유지하도록 한다.

summary | 관료제의 특징

특징	장점(민주주의에 기여)	단점(민주주의에 저해)
법규에 의한 지배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동조과잉, 목표 - 수단 전환
계층제적 구조	상명하복을 통한 질서유지	무사안일주의, 상급자 권위애의 의존
비개인성	공정성, 인간의 감정과 편견배제	개별적 특수성 무시, 인격적 관계 소멸
문서주의	객관성, 정확성, 책임성	번문욕례, 형식주의
전문화와 분업	업무 능률성 향상	훈련된 무능, 할거주의
관료의 전임화	공직의 안정성과 업무능률 향상	관료 제국주의, 변동애의 저항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65~368

▶ ④

20 다음 중 정책평가에서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숙효과: 정책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 ② 회귀인공요소: 정책대상의 상태가 정책의 영향력과는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평균값으로 되돌아가는 경향
- ③ 호손효과: 정책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으로 선정함으로써 정책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대평가 되는 경우
- ④ 혼란변수: 정책 이외에 제3의 변수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책의 영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변수
- ⑤ 허위변수: 정책과 결과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나 마치 정책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변수

【해설】 ③ [X] 크리밍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크리밍 효과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만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조건이 나쁜 구성원들로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일정한 처리를 한 경우 정책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대평가 되는 것을 말한다.

▶ 올바른 지문

- ③ 호손효과 : 실험집단 구성원이 실험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심리적 행동을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 인위적 실험환경의 결과를 일반화한 경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summary | 정책평가의 타당성 저해요인

1. 내적타당성 저해요인

역사적 요소	실험기간동안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
회귀인공요소	실험 전 1회 측정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것을 기초로 개인들을 선발하게 되면, 다음의 측정에서 그들의 평균점수가 될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

2. 외적타당성 저해요인

크리밍 효과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만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
--------	---

2. 정책의 변수

허위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가 없음에도, 인과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변수(허위변수 제거 시 정책효과가 소멸) • 정책평가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변수
혼란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변수 (혼란변수 제거 시 정책효과 크기변화 발생)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294, 297, 298



21 다음 중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에서 강조하는 행정개혁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
- ② 민간-공공부문 간 파트너십 강조
- ③ 규제완화
- ④ 인사관리의 공공책임성 중시
- ⑤ 정치적 통제 강조

【해설】 ① [O] 신공공관리는 구조적 권한 이양과 분권화를 특징으로 하며, 탈신공공관리는 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를 갖춘 재집권화를 강조한다.
 ② [O] 탈신공공관리는 민간-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③ [X] 규제완화는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하는 행정개혁 전략이다. 탈신공공관리에서는 재규제를 강조한다.
 ④ [O] 신공공관리는 경쟁적 인사관리를 강조하는데 반해 탈신공공관리는 공공책임성을 중시한다.
 ⑤ [O] 탈신공공관리는 정부의 정치·행정적 역량강화를 중시하여 정치적 통제를 강조한다.

▶ 올바른 지문

- ③ 재규제의 주창

summary | 신공공관리 VS 탈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	탈신공공관리
소규모의 준자율적 조직으로 분절화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비행구적·유기적 구조, 구조적 권한 이양과 분권화	재집권화, 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
시장지향주의, 규제완화	정부의 정치·행정적 역량 강화, 재규제의 주창
능률성, 경제적 가치 강조	민주화·형평성 등 전통적 행정 가치 동시 고려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	민간-공공부문의 파트너십 강조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66

▶ ③

22 다음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 을(를)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국가재정 운용계획
- ②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③ 예산안편성지침
- ④ 총사업비 관리지침
- ⑤ 예산요구서

【해설】 ③ [O]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summary | 예산의 편성

단 계	해당기관	활동 내용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 ↳ 기재부 장관 (1월 31일까지)	예산 편성과정의 시작 각 부처는 5회계연도 이상 기간 동안 신규사업·기재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재부 장관 (2월~3월)	5회계연도 이상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 작성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기재부 장관 ↳ 각 중앙관서의 장 (3월 31일)	기재부 장관은 국무회의심의를 대통령승인을 받은 후 연도 예산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분야·부처별 한도액 표시 : 총액배분)
부처별 자율편성	각 중앙관서 (4월~5월)	각 중앙관서는 총액한도액 내에서 자체예산 자율편성
각 중앙관서의 예산요구	각 중앙관서의 장 ↳ 기재부 장관 (5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는 예산요구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
기재부의 사정 (예산협의)	기재부 장관 (6월~8월)	각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 ▶ 헌법상 독립기관(국회·대법원·헌재·중앙선관위)과 감사원의 예산요구액을 감액 시 국무회의에서 당해 기관장의 의견을 구할 의무가 있음.
정부예산안 편성	기재부 장관 ↳ 국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각 중앙관서의 예산안 토대로 정부전체 예산안 편성 ↳ 국무회의심의·대통령 승인으로 예산안 확정 ↳ 국회제출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644, 645

23 다음 중 근무성적평정제도에서 다면평가제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무수행 동기 유발
- ②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 ③ 자기역량 강화
- ④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 측정
- ⑤ 평가의 수용성 확보 가능

【해설】 ① [O] 다면평가제는 직무수행의 동기 유발의 효과로 개인의 업무성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
 ② [O] 다면평가제는 조직 내 상하 간·동료 간·부서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③ [O] 다면평가제는 평가의 장단점 환류를 통해 자기 역량 강화의 기회가 촉진된다.
 ④ [X] 역량평가제의 장점이다. 역량평가제는 미래행동의 잠재력을 측정하여 성과에 대한 외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게 한다.
 ⑤ [O] 다면평가제는 특정 피평가자에 대하여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 입체적·다면적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수용성이 높아진다.

summary | 다면평가제의 장단점

장점(유용성)	단점
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수용성 확보 가능	① 인기투표로 변질될 가능성 존재
② 원활한 인간관계 증진의 동기 부여	② 상급자가 업무 추진보다 부하 눈치를 의식하는 행정 발생 가능
③ 업무의 효율성과 이해의 폭 증진 가능	③ 부처별, 직급별로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적합한 평가가 어려울 가능성
④ 평가장·단점 환류를 통해 자기 역량 강화의 기회 촉진	④ 관리자가 부하들의 평가를 받는데 대한 저항감과 불쾌감으로 상사와 부하 간 갈등 야기로 조직 내 화합 저해
⑤ 계층구조가 완화되고 팀워크가 강조되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조직형태에 부합	⑤ 부처의 통합 시 부처이기주의와 소규모 부처 출신자의 부당한 평가 가능성
⑥ 직무수행의 동기유발의 효과로 개인의 업무 성과향상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 가능	⑥ 담합에 의한 평가결과 왜곡 가능성
⑦ 관료적 병폐 시정, 정실인사 폐단방지	
⑧ 감독자의 민주적 리더십 발전에 기여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518, 519

▶ ④

24 다음 중 시험이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냐에 대한 타당성의 개념은?

- ① 내용타당성
- ② 구성타당성
- ③ 개념타당성
- ④ 예측적 기준타당성
- ⑤ 동시적 기준타당성

【해설】 ① [O] 내용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타당성은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시험이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냐에 관한 타당성 개념이다.

summary | 시험의 효용성

기준타당성	① 개념 : 시험성적 = 직무수행 실적(직무수행능력)				
	② 검증				
	<table border="1"> <tr> <td>예측적 타당성 검증</td> <td>시험합격자의 시험성과 근무를 시작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평가한 근무실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td> </tr> <tr> <td>동시적 타당성 검증</td> <td>채직자에게 시험을 시험을 실시하여 얻은 시험성과 그들의 근무실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상관관계를 분석</td> </tr> </table>	예측적 타당성 검증	시험합격자의 시험성과 근무를 시작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평가한 근무실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동시적 타당성 검증	채직자에게 시험을 시험을 실시하여 얻은 시험성과 그들의 근무실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상관관계를 분석
예측적 타당성 검증	시험합격자의 시험성과 근무를 시작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평가한 근무실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동시적 타당성 검증	채직자에게 시험을 시험을 실시하여 얻은 시험성과 그들의 근무실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상관관계를 분석				
내용타당성	<p>① 개념 : 시험내용 = 직무능력요소</p> <p>② 검증 : 전문가 집단이 시험의 구체적 내용과 직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검증</p>				
구성타당성	① 개념 : 시험내용 = 직무능력과 관련한 이론적 구성요소				
	② 검증				
	<table border="1"> <tr> <td>수렴적 타당성</td> <td>동일한 개념을 상이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 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 : 지표 간 상관관계 ↑ ⇨ 구성타당성 ↑</td> </tr> <tr> <td>차별적 타당성</td> <td>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개념을 나타내는 측정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 지표 간 상관관계 ↓ ⇨ 구성타당성 ↑</td> </tr> </table>	수렴적 타당성	동일한 개념을 상이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 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 : 지표 간 상관관계 ↑ ⇨ 구성타당성 ↑	차별적 타당성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개념을 나타내는 측정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 지표 간 상관관계 ↓ ⇨ 구성타당성 ↑
수렴적 타당성	동일한 개념을 상이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 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 : 지표 간 상관관계 ↑ ⇨ 구성타당성 ↑				
차별적 타당성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개념을 나타내는 측정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 지표 간 상관관계 ↓ ⇨ 구성타당성 ↑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495



25 다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이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부터 적게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 재산·소득·권리 등의 일부를 이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테면 누진세 제도의 실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적 분양,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근로소득보전세제 등의 정책이 이에 속한다.

- ① 정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상호 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나타난다.
- ② 계층 간 갈등이 심하고 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 ③ 체제 내부를 정비하는 정책으로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발생한다.
- ④ 대체로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지만 사회간접시설과 같이 특정지역에 보다 직접적인 편익이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 ⑤ 법령에서 제시하는 광범위한 기준을 근거로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특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해설】 ㉠은 재분배정책이다. 재분배정책은 고속득층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 ① [X] 로그롤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분배정책이다.
- ② [O] 재분배정책은 집행에 대한 갈등이 심하고 저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 등의 형성과 중앙정부 수준의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 ③ [X] 구성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 ④ [X]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 ⑤ [X] 규제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88~191

